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3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교회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21. 7. 7. 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4,639,850원의 부과처분, 2021. 7. 8. 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38,180원의 부과처분, 2021. 9. 5. 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7,073,7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1. 19. ○○시 B 종교용지 1687.6㎡를 포함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20. 12. 3. 별지1 목록 제1 내지 5,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¹⁾.

나. 피고는 2021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처분'이라 한다).

순번	날짜	재산세 등 부과 내역
1	2021. 7. 7.	B 지상 건축물 2021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4,546,850원
2		C 지상 건축물 2021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93,000원
3	2021. 7. 8.	D 지상 주택 2021년 1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34,920원
4		○○시 E 지상 주택 2021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03,260원
5	2021. 9. 5.	D 지상 주택 2021년 2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34,920원
6		B 토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6,938,840원

다. 피고는 2021. 7. 10.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2021. 9. 10. 이 사건 제5, 6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시 F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각 송달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4, 6처분에 관하여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은 2021. 8. 24., 이 사건 제6처분은

1) 별지1 목록 제6,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미등기건물이다.



2021. 10. 23. 각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9. 4.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6호증,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원고 주소지에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대표자인 G에게 추가적인 연락이나 송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은 2021. 9. 10., 이 사건 제6 처분은 2021. 10. 23. 각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제5처분은 일반우



편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데(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33조 제1항 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33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3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발생된다(제33조 제1항).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제17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4847 판결).

나)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혹은 지방세기본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0380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과 같은 단체의 경우 그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조사하여 주소지의 이전 여부 혹은 대표자의 변경 여부나 대표자의 주소지 등을 확인한 후 대표자에게 송달하였음에도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별지1 목록 제1 내지 5, 7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 대표자인 G의 주소[○○시 ○○로 H아파트, I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G의 주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4, 6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1회 발송하였다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공



시송달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 사건 공시송달의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1 내지 4, 6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1회 발송하였다가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것을 두고 '반송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나)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기 때문에 원고는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송달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송달 주소를 보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투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제1 내지 4, 6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은 진행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5처분의 송달에 관한 판단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5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발송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건축물 건축공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나대지였으므로, 원고의 주소지에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각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제5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와 같은 날 발송된 이 사건 제6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역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5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5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은 진행될 수 없고, 원고가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건 제5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제5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각 취소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판사 유○○

판사 김○○



별지1

목록

1. ○○시 B 종교용지 1687.6m²
2. ○○시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트라스 및 슬래브지붕 4층 종교시설
1층 555.86m²
2층 544.86m²
3층 547.25m²
4층 310.16m²
지하 662.77m²
3. ○○시 C 대 105.3m²
4. ○○시 C 대 105.3m²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75.53m²
2층 75.53m²
5. ○○시 E 대 93.6m²
6. ○○시 E 대 93.6m² 지상
시멘트 부록조 스테이트층 단층 주택 38.68m² ○○시 D 대 156.5m²
7. ○○시 D 대 156.5m²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층 2층 주택
1층 75.07m²
2층 56.61m²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33조(공시송달)

-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에 따른 처분기간(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내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5

-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